

‘술접대 검사’ 3명중 2명 불기소, 왜?... “4만원 덜먹어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전 회장, 현직 검사 1명, 술자리 주선자로 알려진 검찰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16일 옥중편지에서 변호사와 술접대 대상을 “검사 3명”이라고 했고, 실제로 다른 현직 검사 2명도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항응·수수 사건 전담팀(부장검사 김락현)은 현직 A검사, 김 전 회장, 검찰 출신 B변호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기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술접대 장소에 동석한 다른 현직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향후 검찰(징계) 관련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모 유흥주점에서 B변호사, 현직 검사 3명을 대상으로 술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검사를 제외한 다른 검사 2명은 당일 오후 11시께 이전에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는 다음날 오전 1시께까지 진행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항응수수액은 총 536만원으로

검찰, 김봉현 전 회장·검사 1명·변호사 1명 기소
술접대 자리 동석한 현직 검사 2명 불기소 처분

“밤 11시 이전에 귀가, 향응액은 100만원 안돼”

“11시까진 항응수수 481만원...1명당 96만원”

조사됐다고 전했다. 다만 오후 11시께 이후 발생한 비용(밴드비용, 유흥접객원 추가비용 등)이 5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오후 11시까지의 항응수수액은 481만원이 되고, 여기까지의 검사 3명, 김 전 회장, B변호사의 항응수수액은 각 96만원 가량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발간한 ‘2020 청탁금지법 해설집’에는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격을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돼 있고, 지난 2018년 9월 의정부지법의 약식결정 판례가 담겼다.

해설집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과태료 대상자가 된 C씨는 모두 22명이 식당에서 식사를 해 평균 2만8772원의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항상 및 간부 16명이 식당

의 방에서 식사했고, 수행원과 조합의 팀장 및 직원 6명이 따로 식사해 방과 홀에서 주문한 음식의 종류와 가격이 서로 달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검사 2명의 귀가 시각을 기준으로 음식물 등 항응가액을 산정할 경우 100만원 미만이라고 본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도 항응수수액 산정에 있어 나누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했고, 경



위 및 목적에 비춰 볼 때 향응을 함께 향유한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의미다.

김 전 회장 측은 “김 전 회장은 접대자에 불과해 검사 3명과 B변호사 총 4명으로 술값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 시민위원회(시민위)’를 소집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위를 소집하고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기소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시민위도 오후 11시께 이전에 귀가한 검사 2명의 경우 항응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16일 공개된 첫번째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어치 술접대를 했고, 이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달 21일 두번째 입장문에서 “술접대를 한 검사 3명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했다.

서선욱기자

전동킥보드 화재 원인, 대부분 전기적요인 ‘충전중’ 발생

“정기적으로 구매처 또는 수리점 방문해 점검받을 것” 당부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최근 전동킥보드(퍼스널모빌리티) 배터리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9월 23일 14:20경 발생한 광양시 중동 소재 한 아파트 화재는 승강기 전실에 보관중인 전동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화재로 인해 다수의 거주자가 대피하였으며 8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지난 3일 03:47경에 발생한 화재 또한 광양시 중동 소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는 충전 중인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백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전국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전동킥보드 화재는 17건으로 사망자는 2명이 발생했으며 3천 2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 14건(82.4%), 교통사고 1건(5.9%), 미상 2건(11.8%)이었으며, 전기적 요인의 세부요인을 분석한바 대부분 ‘충전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인정받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과충전(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충전을 하거나



취침 중 충전)을 피하고 ▲겨울철 실내 충전시 배터리 내부의 결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충전해야 하며 ▲현관, 복도 등 위급한 상황에 대피로로 활용되는 장소에서의 충전은 피하는 것이 좋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환경부는 22차 회의에서도 21차 규모 수준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지원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또 개별심사를 위한 실무 평가안 내서와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평가안내서는 개별심사의 평가 단계, 평가 단계별 고려사항, 평가서 작성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심사를 위해 평가기관 합동 검토회의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김미희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294명 추가 인정...총 3838명

환경부, 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위 개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294명을 추가 인정했다.

환경부는 8일 서울역 인근에서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종전 법상 신청자와 피해자로 인

정받지 못한 신청자의 과거 접수 순서로 543명을 심사했으며, 이 중 294명의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인원은 총 3838명으로 늘어났다. 중복지 31명을 뺀 숫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781명, 긴급의료지원 48명, 진찰·검사 지원 40명이다.

러시아·중국 백신 구매 검토 안해...“검증 더 필요”

3상 진행 백신 포함해 모든 것 같이 검토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백신에 대한 구매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브리핑에서 “기존 임상에서 성공물을 보였던 미국과 영국 중심의 백신 외에도 3상에 들어가 있는 모든 백신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국 백신에 대한 구매 계약에 나선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각 백신은 플랫폼별로, 예컨대 R&A(유전자)백신·불활화(사백신) 백신이냐에 따라 특성이 기질도 다르기에 그에 적합한 인구 대상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러시아 국부펀드로부터 러시아의 ‘스투프니크’ 백신 구매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



근 러시아 국부펀드로부터 백신 협의를 하자는 요청이 있어 실무 차원에서 화상 회의를 한 적이 있다”면서도 “아직 스푸트니크V 백신의 임상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신뢰성 검증이 끝나지 않았기에 러시아 백신 구매 검토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아직 어느 백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연구집단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성이 높은지 불확실하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타진하는 게 옳바르다고 생각한다”며 “3상이 진행되고 있는 백신을 포함해 모든 것(백신)의 정보를 모아 그 유효성과 안전성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